행 정 학

해설위원 : 방 성 은 교수

본 문제의 소유권 및 판권은 (주)윌비스고시학원에 있습니다. 무단복사 판매시 저작권법에 의거 경고조치 없이 고발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반드시 OMR카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OMR카드 작성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평>

- 행정학 전 분야에서 고르게 출제되었으며 2편 정책과 4편 인사행정이 상대적으로 비중있게 출제되었습니다.
- 그동안 출제빈도가 낮았던 1편 비교행정, 2편 P. May의 모형이 깊게 출제되고 평소 수업에서 다루지 않았던 루빈(Rubin)의 실시간 예산운영모형이 출제되어 체감적으로 어렵게 느껴졌던 문제입니다.
- 하지만 1편 비교행정, 2편 P. May의 모형의 경우 이론의 기본적 특성을 잘 이해했다면 답을 쉽게 고를 수 있으며 나머지 17문제들은 쉽게 출제되어 기본개념을 정확히 이해한 수험생이라면 고득점 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 수험생의 편의를 위하여 편별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문 1. 윌슨(Wilson)의'행정연구(The Study of Administration, 1887)'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개혁을 통해 특정지역 및 계층중심의 관료파벌을 해체하고자 했다.
②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을 강조했다.
③ 정치와 행정을 분리하고자 했다.
④ 효율적 정부 운영에 관심을 두었다.

[정답] ①

[해설] 현대 행정학의 출발점이 된 Wilson은 「행정의 연구(the Study of Administration)」(1887)라는 논문을 저술하고 정당정치에 예속되었던 행정의 고유영역을 내세우면서 행정의 전문성, 중립성, 능률성(효율성)을 강조하고 행정은 '관리와 경영 그리고 전문적·기술적 영역'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정치와 행정의 분리를 강조하고 기업에서의 관리원칙을 행정에 적용할 것을 제안하면서 정치행정이원론(정치와 행정의 차이점), 공사행정일원론(행정과 경영의 유사점)을 제창하였다.

① (X) : 엽관제의 내용이다. Jackson대통령은 동부지역의 귀족과 대부호 등 권력계층이 독점하던 정부관료제를 정부개혁을 통해 해체하기 위하여 1829년 엽관제를 도입함으로써 정치행정 개혁과 함께 미국사회에 대중민주주의의 싹을 피웠다.(2017 비타민행정학 6페이지)

문 2. 정부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② 규제개혁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규제영향분석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는 관료에게 규제비용에 대한 관심과 책임성을 갖도록 유도한다는 점이다.
④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두고 있다.

[정답] ④

[해설]

③ (O) : 규제영향분석은 규제를 신설, 강화하고자 할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제도로서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등을 통하여 관료에게 규제비용에 대한 관심과 책임성을 갖도록 유도한다.

④ (X) :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아닌, 대통령 소속 위원회이다.(2017 비타민행정학 49페이지)

문 3.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높이고 그 역할을 확대하는 민간화(privatization) 방법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진입규제 강화
② 바우처 제공
③ 정부계약(contracting out) 활용
④ 공동생산(co-production)

[정답] ①

[해설] 민간화 또는 민영화는 정부부문을 줄이고 민간부문을 넓히는 조치로서 정부계약, 인허가, 바우처, 보조금 지급 등이다.

① (X) : 진입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민간부문에 제한을 가하는 소극적 규제로서 정부기능을 확대하는 것이므로 민간화가 아니다. 주의할 것은 규제 및 조세 유인(regulatory and tax incentive)도 민간화의 한 방식이다. 그러나 이 경우의 규제는 조세지출(비과세, 감면)과 같은 유인을 주는 적극적 규제로서 해당 민간부문을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야기한다.

④ (O) : 공동생산(co-production)은 공공과 민간부문이 협력적 분업관계를 형성하여 공공서비스를 함께 생산하는 방식으로서 넓은 의미의 민간화에 해당된다.(2017 비타민행정학 62페이지)

문 4. 비교행정의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독자적인 연구대상을 획정하기가 어렵다.
② 환경과 행정의 교류적 관계를 경시한 정태적 접근이다.
③ 처방성과 문제해결성을 강조함에 따라 행정의 비과학화를 초래하였다.
④ 행정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함으로써 행정의 독자성을 무시하고 행정의 종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답] ③

[해설]

③ (X) : 1950년대 대두된 비교행정은 선진국과 후진국 정부관료제의 기능을 비교한 이론이므로 행정체제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행정의 과학화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비교행정은 구조와 기능 분석에 중시하는 구조기능주의의 영향을 받은 균형이론으로 동태적인 사회변동을 고려하지 못하는 정태적 접근이므로 처방성과 문제해결성을 강조하지 않았으며 행정의 독자성을 무시하고 종속변수로서의 성격을 강조하는 등 결정론적·비관론적 시각을 제시하였다. 처방성과 문제해결성을 강조한 이론은 1930년대 경제대공황기에 출현한 통치기능설, 1960년대 후진국의 발전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대두된 발전행정, 1960년대 미국사회의 격동기에 대두된 신행정학(1960년대 말) 등이다. 처방성과 문제해결성을 강조하게 되면 과학적 분석을 소홀이 하게 되므로 과학성은 자연스럽게 저하될 수밖에 없다.

① (O) : 비교행정은 선진국과 후진국으로 연구범위를 확장하고 서로 다른 국가의 행정현상을 비교연구 함으로써 독자적인 연구대상을 획정하기가 어렵다.

② (O) : 비교행정은 환경과 행정의 교류적 관계를 경시한 정태적 접근이다. 환경과 행정의 교류적 관계를 중시하기 시작한 것은 1940년대 생태론이다. 하지만 생태론 역시 정태적 접근이었으며 환경과 행정의 교류적 관계를 동태적으로 분석한 것은 1950년대 체제이론이다.(2017 비타민행정학 135, 137페이지)

* 비교행정과 발전행정 – 2017 비타민행정학 137페이지

구 분	비교행정 – 균형이론	발전행정 – 불균형이론
대두배경	1950년대 미국의 대외원조	비교행정의 정태적 균형론
연구방법	과학적·서술적(why), 가치중립 (기능주의 – 체제의 특징 중시)	처방적·규범적·실천적(how), 가치지향(실용주의 – 체제의 능력 중시)
행정이념	특별히 강조하는 행정이념 없음	효과성(발전목표의 달성도), 합목적성 강조
변동의 관점	• 균형을 이루기 위한 정태적 변동 •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전이적 변화	• 쇄신적 변화를 위한 동태적 변동 • 자체적으로 계획된 변화
관 료	피동적 종속변수	능동적 독립변수(발전행정인 – 쇄신적 가치관)
정책결정 도구	체제분석(SA) – 경제적 합리성	정책분석(PA) – 발전목표와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적 합리성 포함
분석방법	횡단면적·공간적 차원	미래지향적·시간적 차원
이론의 성격	결정론, 비관주의	자원론, 임의론, 낙관주의

문 5. 로위(Lowi)는 강제력의 행사방법과 강제력의 적용영역 차이에 따라 정책을 네 가지(A~D)로 유형화하고, 정책유형별 특징과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강제력의 적용영역 / 강제력의 행사방법	개별적 행위	행위의 환경
간접적	A	B
직접적	C	D

① A에서는 정책내용이 세부단위로 쉽게 구분되고 각 단위는 다른 단위와 별개로 처리될 수 있다.

② B에는 선거구 조정, 정부조직이나 기구 신설, 공직자 보수 등에 관한 정책이 포함된다.

③ C에서는 피해자와 수혜자가 명백하게 구분되며 정책결정자와 집행자가 서로 결탁하여 갈라먹기식(log-rolling)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

④ D에서는 지방적 수준에서 분산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

[정답] ④

[해설] Lowi는 정책내용 또는 정책유형이 정치행태를 결정한다고 주장하면서 강제의 적용대상과 강제의 가능성 두 변수로 4가지 정책유형을 구분하였다.

구 분		강제의 적용대상	
		개인의 행위	행위의 환경
강제력의 행사방법	원격적(간접적)	분배정책(ex. 수출보조금 지급)	구성정책(ex. 정부기관 신설)
	근접적(직접적)	규제정책(ex. 독과점 기업 제재)	재분배정책(ex. 누진세)

① (O) : A는 분배정책이다. 분배정책은 정책내용이 세부단위로 쉽게 구분되고 각 단위는 다른 단위와 별개로 처리될 수 있다.

② (O) : B는 구성정책이다. 선거구 조정, 정부조직이나 기구 신설, 공직자 보수 등은 체제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성정책이다.

③ (O) : C는 규제정책이다. 규제정책은 피해자와 수혜자가 명백하게 구분되며 정책결정자와 집행자가 서로 결탁하여 갈라먹기식(log-rolling)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 log-rolling은 분배정책의 특성이다.

④ (X) : D는 재분배정책이다. 재분배정책은 격차를 시정해야 하므로 지방적 수준에서 분산적으로 이루지질 수 없으며 전국적 수준에서 통합적, 집권적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2017 **비타민행정학** 203, 2권 180페이지)

문 6. 메이(May)는 정책의제설정의 주도자와 대중의 관여 정도에 따라 정책의제설정 과정을 네 가지 유형(A~D)으로 구분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중의 관여 정도 / 정책의제 설정의 주도자	높음	낮음
민간	A	B
정부	C	D

① A는 외부집단이 주도하여 정책의제 채택을 정부에게 강요하는 경우로 허쉬만(Hirschman)이 말하는'강요된 정책문제'에 해당된다.

② B의 경우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가진 집단은 대중들에게 정책을 공개하여 지지를 획득하려고 한다.

③ C에서는 이미 민간집단의 광범위한 지지가 형성된 이슈에 대하여 정책결정자가 지지의 공고화(consolidation)를 추진한다.

④ D는 정부의 힘이 강하고 이익집단의 역할이 취약한 후진국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난다.

[정답] ②

[해설] P. May는 대중의 지지도(대중의 관여정도)와 논쟁의 주도자를 기준으로 정책의제설정 과정의 4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구 분		대중의 지지도	
		높 음	낮 음
논쟁의 주도자	사회적 행위자	외부주도형 (outside initiation model)	내부주도형 (inside initiation model)
	국 가	굳히기형(consolidation model)	동원형(mobilization)

① (O) : A는 외부주도형으로서 외부집단이 주도하여 정책의제 채택을 정부에게 강요하는 경우이다. 허쉬만(Hirschman)이 말하는'(시민에 의하여) 강요된 정책문제'에 해당된다.

② (X) : B는 내부주도형으로서 Cobb과 Ross의 내부접근형 중 외부집단이 주도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여기서는 특별히 의사결정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외부집단이 정책을 은밀하게 주도하므로 정책의 대중확산이나 정책경쟁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며 대중들에게 정책을 공개하여 지지를 획득하고자 하지 않는다.(ex. 무기계약, 특혜금융)

③ (O) : C는 굳히기형으로서 민간집단의 광범위한 지지가 형성된 이슈이므로 정책결정자가 정책의제로 채택하고 지지의 공고화(consolidation)를 추진한다.

④ (O) : D는 동원형으로서 정부의 힘이 강하고 이익집단의 역할(투입기능)이 취약한 후진국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난다.(2017 **비타민행정학** 234페이지)

문 7. 의사결정모형 중 쓰레기통 모형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진빼기 결정

② 의사결정을 구성하는 네 가지의 흐름

③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④ 갈등의 준해결

[정답] ④

[해설]

④ (X) : 갈등의 준해결은 쓰레기통모형이 아니라 회사모형의 내용이다. 회사모형은 조직을 서로 다른 목표를 추구하는 하위조직들의 연합체로 보고 하위조직 간 협상을 통하여 결정이 이루어지므로 갈등이 전체 조직적 차원에서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잠정적으로 해결된다(갈등의 준해결).(2017 **비타민행정학** 255페이지)

문 8. 정책평가의 논리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내적타당성이란 다른 요인들이 작용한 효과를 제외하고 오로지 정책 때문에 발생한 순수한 효과를 정확히 추출해 내는 것과 관련되는 개념이다.

② 내적타당성을 위협하는 성숙요인이란 순전히 시간의 경과 때문에 발생하는 조사대상집단의 특성변화를 말한다.

③ 진실험설계의 주요 형태 중 하나인 단일집단 사전사후측정설계는 동일한 정책대상집단에 대한 사전측정과 사후측정을 통해 정책효과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④ 결과변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제3변수들을 식별하여 통계분석모형에 포함시킨 후 정책효과를 추정하는 것은 비실험적 설계의 한 예이다.

[정답] ③

[해설]

① (O) : 내적 타당성은 인과관계의 적합성 정도로서 다른 요인(매개변수)이 아닌 정책(원인) 때문에 효과(결과)가 정확히 나타나는 정도이다.

② (O) : 성숙효과(역사요인)는 시간의 경과에 의한 자연스러운 변화로 효과가 왜곡되는 내적 타당성 저해요인이다.

③ (X) : 단일집단 사전사후측정설계는 동일한 정책대상집단에 대한 사전측정과 사후측정을 통해 정책효과를 추정하는 방식으로서 진실험이 아니라, 대표적 비실험의 유형이다. 진실험은 동질적인 두 개의 집단(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하여 실험을 하는 방식이고 비실험은 하나의 실험집단만을 구성하여 실험을 하는 방식이다.

④ (O) : 대표적 비실험 중 통계적 비실험의 내용이다.(2017 **비타민행정학** 334페이지)

문 9. 관료제 병리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동조과잉과 형식주의로 인해 '전문화로 인한 무능'현상이 발생한다.

② '피터의 원리(Peter Principle)'가 지적하듯이 무능력자가 승진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③ 상관의 권위에 의존하면서 소극적으로 일을 처리하려는 할거주의가 나타난다.

④ 목표가 아닌 수단으로서의 규칙과 절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번문욕례(red tape) 현상이 나타난다.

[정답] ②
[해설]
① (X) : '전문화로 인한 무능'현상은 동조과잉과 형식주의가 아닌, 전문화(분업)의 부작용이다.
② (O) : '피터의 원리(Peter Principle)'는 되풀이하는 승진을 하다보면 해당 직위에서 무능력자가 된다는 것으로서 결국 해당 직위의 무능력자가 승진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③ (X) : 상관의 권위에 의존하면서 소극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은 할거주의가 아니라 무사안일주의이다. 할거주의는 부분에 집착하는 현상으로서 전문화(분업)의 부작용이다.
④ (X) : 목표가 아닌 수단으로서의 규칙과 절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번문욕례(red tape)가 아니라 동조과잉이다. 번문욕례는 복잡한 절차로서 내용보다 형식을 중시하는 형식주의의 결과이다.(2017 비타민행정학 419페이지)

문 10. 행정 조직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발생하는 갈등 요인이 아닌 것은?
① 개인의 이기적인 태도
② 기능이나 업무의 특성에 따른 분업구조
③ 제한된 자원의 하위 부서 간 공유
④ 업무의 연계성으로 인한 타인과의 협조 필요성 증가

[정답] ①
[해설]
① (X) : 개인의 이기적인 태도는 구조가 아닌 인간적 측면(개인의 심리적 성향)에서의 갈등발생 요인이다. 구조는 권한과 책임, 직무 또는 업무, 직위, 직책 등 조직의 공식적인 형태나 체계로서 보통 조직도표로 표현된다. ② 분업, ③ 하위부서, ④ 업무 등은 모두 구조적 측면의 갈등발생 요인이다.(2017 비타민행정학 17, 462페이지)

문 11. 기존 전자정부와 비교한 스마트 전자정부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개인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② 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트 TV 등 다매체 활용
③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개발
④ 1회 신청으로 연관 민원 일괄처리

[정답] ③
[해설] 스마트정부는 Web 3.0에 기반을 둔 유비쿼터스 정부이다.
③ (X) :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개발은 전통적 정부이다. 기존 전자정부는 국민(수요자) 중심인 반면 스마트 전자정부는 국민 개개인 중심이다. (2017 비타민행정학 507페이지)
* 정부 1.0, 2.0, 3.0 비교 - 2017 비타민행정학 507페이지

구분	정부 1.0	정부 2.0	정부 3.0
운영방향	정부 중심	국민 중심	국민 개개인 중심
핵심가치	효율성	민주성	확장된 민주성
참여	관주도·동원 방식	제한된 공개·참여	능동적 공개·참여, 개방·공유·소통·협력
행정서비스	일방향 제공	양방향 제공	양방향·맞춤형 제공
수단(채널)	직접 방문 (面對面 접촉)	인터넷 (유선 온라인 접촉)	무선인터넷, 스마트 모바일 (무선 모바일 접촉)
인터넷 패러다임	Web 1.0	Web 2.0	Web 3.0
정부형태	전통적 정부	전자 정부	유비쿼터스 정부

문 12.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엽관주의는 행정의 민주화에 공헌한다는 장점이 있다.
② 실적주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다.
③ 잭슨(Jackson) 대통령이 암살당한 사건은 미국에서 실적주의 도입의 배경이 되었다.
④ 엽관주의는 공직의 상품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정답] ③
[해설]
③ (X) : 엽관제를 도입한 잭슨(Jackson) 대통령은 암살당한 적이 없다. 엽관주의자 기토(C. Guiteau)에 의한 가필드(J. A. Garfield) 대통령 암살사건(1881)이 발생하여 엽관주의에 대한 비판여론이 형성되면서 실적제가 도입되었다. 즉 대통령 암살사건은 실적제가 도입된 정치적 배경이다.
④ (O) : 공직의 상품화는 매관매직을 의미한다. 엽관제는 매관매직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공직에 계속 머무르기 위해서는 소속정당이 승리해야 하기 때문에 공금을 횡령하여 정당에 헌납하고, 매관매직으로 불법정치자금을 조정하고 정치꾼과 기업에 의한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가 만연되면서 공직의 사유화·상품화 경향이 야기되고 행정윤리가 크게 저하되었다. (2017 비타민행정학 549페이지)

문 13. 공무원 교육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장훈련(on the job training)은 피훈련자가 실제 직무를 수행하면서 직무수행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방법이다.
② 강의, 토론회, 시찰, 시청각교육 등은 태도나 행동의 변화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③ 액션러닝(action learning)은 소규모로 구성된 그룹이 실질적인 업무현장의 문제를 해결해 내고 그 과정에서 성찰을 통해 학습하도록 하는 행동학습(learning by doing) 교육훈련 방법이다.
④ 감수성훈련(sensitivity training)은 대인관계의 이해와 이를 통한 인간관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정답] ②
[해설]
② (X) : 강의, 토론회, 시찰, 시청각교육 등은 태도나 행동의 변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강의나 토론회, 시청각교육은 일반교육 훈련이고 시찰은 체험학습 훈련이다. 행동의 변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역할연기와 감수성훈련이다.(2017 비타민행정학 616페이지)
* 교육훈련의 목적과 종류 - 2017 비타민행정학 616페이지

목 적	종 류
일반교육훈련	강의식 교육, 회의식 교육, 토론식 교육, 대토론식 교육
체험학습훈련	현장훈련(실무수습, 임시대역, 순환보직 등), 현장견학(시찰)
행동변화훈련	역할연기, 감수성 훈련
문제해결훈련	브레인스토밍, 신디케이트, 사례연구, 워크숍

문 14. 공무원 보수제도 중 연봉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② 고정급적 연봉제에서 연봉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성된다.
③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에서 기본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된다.
④ 성과급적 연봉제와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의 성과연봉은 전년도의 업무실적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급된다는 점에서 유사한 면이 있다.

[정답] ②
[해설]
② (X) : 고정급적 연봉제에서 연봉은 기본연봉만으로 구성되고 대통령,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이 해당된다.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성되는 것은 4급에 적용되는 성과급적 연봉제이다.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성하되, 기본연봉이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되는 것은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이다. (2017 비타민행정학 648페이지)
* 보수체계 - 2017 비타민행정학 648페이지

구 분		내 용
연봉제	정무직	기본연봉 ⇨ 고정급적 연봉제
	고위공무원단	기본연봉(기준급 + 직무급) + 성과연봉 ⇨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4급	기본연봉 + 성과연봉 ⇨ 성과급적 연봉제
비연봉제	5급 이하	봉급(기본급여) + 수당(부가급여) + 성과상여금

문 15. 고충민원 처리 및 부패방지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②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국민감사청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③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시민고충처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② (X) : 국민감사청구는 국민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닌, 감사원에 청구하는 제도이다. 반면 주민감사청구는 자치단체 주민이 감독기관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④ (O) :국가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의 고충을 처리하지만, 자치단체의 경우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자치단체 주민의 고충을 처리한다.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2017 **비타민행정학 683페이지**)

문 16. 예산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입법부가 사전에 의결한 사항만 집행이 가능하다는 사전의결의 원칙의 예외로는 긴급명령과 준예산 등이 있다.
② 예산총계주의는 모든 세입과 세출이 예산에 계상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정부가 특정 수입과 특정 지출을 직접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한계성 원칙의 예외로는 예비비, 계속비 등이 있다.
④ 예산은 결산과 일치해야 한다는 예산 엄밀성의 원칙은 정확성의 원칙이라고도 불린다.

[정답] ③
[해설]
③ (X) : 정부가 특정 수입과 특정 지출을 직접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한계성 원칙이 아니라 통일성원칙이다. 예비비(초과지출), 계속비(연도경과) 등은 한계성원칙(초과지출 금지, 목적외 사용 금지, 연도경과 금지)의 예외이다. (2017 **비타민행정학 2권 28페이지**)

*** 예산의 원칙과 예외 – 2017 비타민행정학 2권 29페이지**

전통적 예산원칙(통제성 – 입법부 우위)			현대적 예산원칙 (신축성 – 행정부 우위)
원 칙	내 용	예 외	
공개성의 원칙	국민에게 공개	신임예산	• 계획의 원칙 • 책임의 원칙 • 보고의 원칙 (각종 보고에 기초) • 적절한 수단의 원칙 • 다원적 절차의 원칙(사업성격에 따라 예산절차를 다르게 운영) • 재량의 원칙 • 시기신축성의 원칙 • 예산기구 상호성의 원칙(상호협력)
명료성의 원칙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편성	총액예산	
정확성의 원칙	예산=결산(수지균형)	적자예산, 흑자예산, ~~조상충용~~	
명세성의 원칙	구체적으로 항목화	총액예산	
완전성의 원칙	모두 예산에 계상 (포괄성의 원칙, 예산총계주의)	순계예산, 기금, 세입세출외, 수입대체경비·수입금마련지출	
통일성의 원칙	국고로 통합, 국고에서 지출 (특정세입과 특정세출의 직접 연계 금지)	특별회계, 기금, 목적세(교육세·교통에너지환경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 등), 수입대체경비·수입금마련지출	
사전의결의 원칙	의회가 사전 심의 및 의결	준예산, 예비비, 전용, 사고이월, 재정상 긴급명령(대통령), 선결처분(자치단체장), 수입대체경비·수입금마련지출	
한정성의 원칙	목적 외 사용금지(질적 한정성)	이용, 전용	
	초과지출 금지(양적 한정성)	예비비, 추가경정예산	
	연도경과 금지(시간적 한정성)	이월, 계속비, 과년도 수입 및 지출, 국고채무부담행위, ~~조상충용~~	
단일성의 원칙	재정활동을 단일예산으로 편성	특별회계, 기금, 추가경정예산, 공기업 예산	

문 17. 루빈(Rubin)의'실시간 예산운영(Real Time Budgeting)'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입 흐름에서 의사결정–'누가, 얼마만큼 부담할 것인가'에 관한 의사결정으로 의사결정의 흐름 속에는 설득의 정치가 내재해 있다.
② 세출 흐름에서 의사결정–'누구에게 배분할 것인가'에 관한 의사결정으로서 선택의 정치로 특징지어지며, 참여자들은 지출의 우선순위가 재조정되기를 바라거나 현재의 우선순위를 고수하려고 노력한다.
③ 예산 균형 흐름에서 의사결정–'예산 균형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관한 의사결정으로 제약조건의 정치라는 성격을 지니며, 예산균형의 결정은 근본적으로 정부의 범위 및 역할에대한 결정과 연계되어 있다.
④ 예산 과정 흐름에서 의사결정–'계획된 대로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사결정으로 기술적 성격이 강하고 책임성의 정치라는 특성을 지니며, 예산계획에 따른 집행과 수정 및 일탈의 허용 범위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다.

[정답] ④
[해설]
④ (X) : 루빈(Rubin)의'실시간 예산운영(Real Time Budgeting)'모형 중 예산과정 흐름이 아닌 예산집행 흐름에서의 의사결정에 해당된다. 예산과정 흐름에서의 의사결정은 어떻게 예산을 결정하는가, 특히 누가 예산을 결정하는가에 대한 것이다.(윤영진)

*** 루빈(Rubin)의 실시간 예산운영(RTB, Real Time Budgeting) 모형 – 윤영진**
1. 의의 : 루빈(Rubin)의 실시간 예산운영모형은 서로 성질이 다른 그러나 서로 연결된 세입, 세출, 균형, 집행, 과정의 5개 의사결정 흐름이 통합되면서 초래되는 의사결정모형이다. 여기서 '실시간'이란 한 결정의 흐름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이 다른 결정의 흐름과 환경으로부터 오는 정보와 결정에 계속적으로 적응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실시간 예산운영모형은 경제적, 정치적 환경에 개방되어 있으며 변화하는 외부요인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강조한다.
2. 내용 : 5가지 흐름들은 핵심정보가 서로 연계시켜 주기 때문에 준독립적이지만 상호의존적이다.

세입 흐름	누가 얼마만큼 부담할 것인가의 질문에 답하는 것이다.	설득의 정치
세출 흐름	예산획득을 위한 경쟁과 예산 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이다.	선택의 정치
예산 균형	예산균형을 어떻게 정의하고 달성할 필요가 있는지,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다.	제약 조건의 정치
예산 집행	예산계획에 따른 집행과 수정 및 일탈의 허용범위에 관한 문제로서 본질적으로 기술적 성격이 강하다.	책임성의 정치
예산 과정	어떻게 예산을 결정하는가, 특히 누가 예산을 결정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예산결정 방식과 예산결정 주체의 정치

문 18. 다음은 예산의 이용과 전용에 대한 설명이다. ㉠과 ㉡에 해당하는 것은?

> 이용은 국회에서 승인된 예산 중 (㉠) 간 울타리를 뛰어 넘어 자금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반면, 전용은 (㉡) 간 울타리를 뛰어 넘어 자금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	㉡
①	장	관, 항, 세항, 목
②	장, 관	항, 세항, 목
③	장, 관, 항	세항, 목
④	장, 관, 항, 세항	목

[정답] ③
[해설] 장·관·항은 입법과목으로서 상호 간의 변경을 이용(移用)이라 하고 이용 시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국회의 심의·의결을 필요로 한다. 세항·목은 행정과목으로서 상호 간의 변경을 전용(轉用)이라 하고, 전용 시에는 국회의 심의·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행정부 재량에 의한다.(2017 **비타민행정학 2권 45페이지**)

*** 예산과목 – 2017 비타민행정학 2권 45페이지**

구 분	입법과목(국회제출○)			행정과목(국회제출×)	
세입예산		관(款)	항(項)		목(目)
세출예산	장(章)	관(款)	항(項)	세항(細項)	목(目)

* 이용, 전용, 이체 - 2017 비타민행정학 2권 117페이지

구 분	이 용	전 용	이 체
내 용	입법과목 항목변경 (목적의 변경)	행정과목 항목변경 (목적의 변경)	정부조직법령 제개폐로 직무와 권한변동시 예산도 따라 가는 것(소속의 변경)
국회의결	○	×	×(정부조직법을 국회가 이미 의결)
주 체	중앙관서의 장	중앙관서의 장	기획재정부장관(여러 부처와 관련)

문 19.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투표제도, 주민발안제도, 주민소환제도가 모두 시행되고있다.

② 지방자치법은 주민감사청구 요건으로 시・군・자치구의 경우 19세 이상 주민 5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된 적이 있다.

④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답] ②
[해설]
② (X) : 19세 이상 주민은 시・도는 500명,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시・군・자치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19세 이상 주민 수 이상의 연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O) : 주의를 해야 한다. 지방재정법(제39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6조)은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이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절차상 구속력은 인정되지만 내용상 구속력은 인정되고 있지 않다. (2017 비타민행정학 2권 249페이지)

문 20. 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교부세의 기본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를 줄임으로써 기초적인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② 세외수입은 연도별 신장률이 안정적이며 그 종류와 형태가 다양하다.

③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의 지방교부세가 운영되고 있다.

④ 대부분의 국고보조사업에는 차등보조율이 적용되고 있다.

[정답] ①
[해설]
① (O) :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내국세의 일정비율을 재정격차를 반영하여 교부하므로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기초적인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② (X) : 세외수입은 연도별 신장률이 불안정적이어서 지방재정 예측이 곤란하며 그 종류와 형태가 다양하다.
③ (X) : 분권교부세는 2015년 1월부터 폐지되고 보통교부세로 통합되었으며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되었다. 따라서 현재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4가지 종류로 운영되고 있다.
④ (X) : 국고보조금은 대부분 정률보조인 기준보조율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며 일부 자치단체만 차등보조율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국고보조금은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를 심화시키는 문제가 있다.